



코스피	2307.03 (-15.85)	코스닥	716.84 (-0.13)
금리 (미국 3년)	1.92 (+0.01)	환율 (원/달러)	1110.30 (-2.60) (3일)



[뉴스]
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말로만 '소비자가 왕'
02

온라인 카페 글 읽고 9개월 만에 임대주택 정책 뒤집었나

“장관님, 인터넷 보신건가요?” 조롱받는 부동산 정책

김현미 장관 발언에
정책 불신·비난 거세
참여정부 재현 우려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장관님, 지금 인터넷 보고 계시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카페’ 발언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임대주택 등록을 독려했던 정부가 돌연 정책을 뒤집고, 집값 상승에 대한 불씨는 꺼지지 않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일각에선 ‘참여정부’ 때 처럼 집값 폭등 현상이 재현될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관련기사 2·3면〉

◆ 거꾸로 가는 부동산 정책

3일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김현미 장관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

다”며 “세제 혜택이 과한 것 같아 조금 줄어야겠다”고 밝혔다.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 혜택을 확대했다. 올 5월 양도소득세 중과에 앞서 다주택자가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임대 사업자 수가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을 수정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김현미 장관 여기 모니터링 자주 하는 듯 [5]
##김현미 장관 보세요##양도세 중과 없애야 팔사람 높고 집값 내려가지!! [15]
김현미를 국토부장관에 누가 추천했을까요 [17]
김현미 "등록 임대주택 세제 등 혜택 축소 검토" [16]
김현미 장관님 정책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 임대사업자 혜택 없애기 [12]
김현미 누님이 추석전에 추가 공급할 곳 발표한다네 [8]
김현미 누나보세요 [6]
김현미 장관 카페에서 누군지 찾을 방법이 있습니다! [5]
김현미를 찾아라~~~ [7]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카페’ 발언 후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비난의 도가 담긴 다수의 글들이 게시되었다. /커뮤니티 화면 캡처

8만명의 다주택자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 이유다.

특히 김 장관이 “부동산 카페에 가면 혜택이 많으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자”하는 사람이 많다.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의 도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발언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국토부장관이 개인적 이야기를 나누는 익명의 공간인 인터넷 카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정책을 수

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주말새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인터넷 보고 정책 을 만드느냐’, ‘장관님 보고 계시죠?’, ‘김현미 장관 보세요’ 등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일각에선 정부가 집값에만 집중하다 보니 주거복지 사업 등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할 정책은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도시 재생 뉴딜 사

업지로 99곳을 선정, 지난해보다 30곳을 확대했다. 그러나 서울의 대규모 재생사업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서 배제됐다.

◆ 참여정부 재현?... '결국 상승 기대'

부동산 정책이 좀처럼 먹혀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결국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현재의 정책 흐름이 참여정부때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당시의 분위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3~2018년까지 역대 정권별 집권 1년차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참여정부와 현 정부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참여정부 집권 1년차엔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가 14.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은 15.88%, 수도권은 14.95%, 한강 이남은 19.23%, 한강이북은 8.43%로 전체적으로 상승 곡선을 탔다. 문재인정부 역시 집권 1년차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8.98%, 서울

시는 19.93%, 한강 이남 21.98%, 한강이북 16% 등으로 높다.

NH부동산 집피지기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에도 현재와 같이 지속적인 투기억제 정책이 나왔다. 당시 주택거래신고제,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이 도입됐다. 그 결과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사상 최대로 폭등했다. 문재인정부도 출범 이후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동북부 지역까지 상승세를 타는 등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진미운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은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등을 보면 매매 시장보다 임대차 시장, 특히 임대료를 규제해 집을 팔게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혜택 받은 것 만큼 조건부로 임대료 규제를 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함께 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새롭게 바뀐 광화문글판

3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 외벽의 ‘광화문글판’이 가을편으로 새로 단장했다. 이번 가을편은 오장환 시인의 ‘종이비행기’에서 발췌한 문안을 담았다. /연합뉴스

포스코, 5년간 45조 투자 2만명 고용

女 정부 일자리 창출 동참
글로벌시장 경쟁력 강화도



최정우 포스코 회장.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대규모 인재 채용에 나선 가운데 포스코그룹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그룹은 새로운 비전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실천을 구체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45조원을 투자하고, 2만명을 고용한다고 3일 밝혔다.

취임한지 한 달 가량이 된 최정

우 회장이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최근 삼성과 현대차, SK 등 주요 그룹의 대규모 투자·고용 발표에 가세했다.

이날 포스코는 “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

업 시민’의 실천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45조원 투자와 2만명 고용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자는 최근 5년간(2014~2018년) 투자 규모인 18조원에 비해 2.5배 수준이며, 고용은 같은 기간 (7000명)의 3배 가까운 수치다. 특히 이를 통해 12만명의 추가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룹 측은 기대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집행될 투자는 철강사업 고도화와 신성장산업 발굴, 친환경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 등에 집중된다.

〈4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골목상권의 새 포식자 준대형마트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제외
저가판매·24시간 운영도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혼숨 ↑



한밤중에도 운영 중인 준대형마트

/메트로DB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들어 혼숨 쉬는 날이 늘었다. 동네에 대형 식자재 할인마트가 생기고 고객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아니다 보니 출점제한과 휴무일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식자재 마트 때문에 A씨를 비롯한 인근 슈퍼마켓과 편의점 점주들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 대기업의 영업을 규제하면 소비자의 발길을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으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다양한 유통산업 관련 법안들을 내놓았다. 근거리 출점 제한과 의무휴무일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발길은 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으로 향하지 않았다. 수혜는 엉뚱한 곳에 돌아갔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준대형할인마트가 급성장하면서 지역 시장경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마트를 꼽자면, 서원

유통, 세계로마트, 탑마트, 홈마트 등이다.

준대형마트는 다품목을 대량구매 후 특정 물품별로 시장가격보다 저가에 판매함으로써 품목별 영세상인의 매출을 잠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준대형마트는 모두 6만개이며 연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곳만 25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서원유통은 1조 5791억원, 세계로마트는 96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대표적인 예로 세계로마트는 전국에 약 50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이 되지만, 이러한 준대형마트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규모 점포로 시작해 크게 성공한 자수성가의 예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준대형마트까지 규제해야 할지 말지 딜레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

만,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출점에 대한) 일정선은 지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통시장과 동네 영세슈퍼에 대한 고사로 2010년 11월 국회는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에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켰다. 또 지자체별로 매월 2일 이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도 제한했다. 준대형마트는 예외다.

준대형마트가 몸집을 부풀리는 동안 SSM 점포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대형마트의 부진과 성장한 계에 부딪힌 대형 유통기업의 고민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2015년 371개 이던 매장이 2016년 368개, 지난해 365개로 줄더니 현재는 353개 매장으로 대폭 줄었다. 롯데슈퍼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